

장동혁, 광주 찾아 “5·18 정신은 대한민국 모두의 것”

취임 후 첫 5·18묘역 찾은 장동혁, 시민 반대에 현화분향 못하고 묵념만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6일 광주를 찾아 “5·18 정신은 그 어느 누구의 것이 아니라 미래세대를 포함해서 대한민국 국민 모두의 것이어야 된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장 대표는 이날 광주 북구 광주종합소 펄물 부지를 방문한 뒤 기자들과 만나 “오늘 5·18 민주화 묘역을 찾아서 민주화 영령들에게 헌화와 분향하고 묵념으로 예를 갖추려 했지만 현장 상황이 여의지않아 추모탑 앞에서 묵념으로만 예를 갖추게 됐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국민의힘은 그동안 5·18에 대해 여러차례 진정성 있는 사과를 했고 당 강령에도 5·18정신을 계승한다고 명시돼 있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진정성이 아직 다 전달되지 않은 것 같다. 저희들의 마음이 전달될 때까지 끝까지 최선을 다하고 노력하겠다”고 했다.

장 대표는 월1회 호남 방문 계획에 대해 “앞으로 매달 호남을 방문해 여기 지역에 있는 분들과 직접 긴밀히 소통하고 지역민이 당면한 여러 민생 문제와 지역 현안 문제를 누구보다 앞장서서 해결하겠다”며 “진정성있는 모습을 보여드리겠다”고 말했다.

그는 ‘한달 전 윤석열 전 대통령을 면회 하면서 문쳐 싸우자고 한 발언은 뉘냐’는 질문에 “지금 대한민국의 법치주의와 민주주의가 위기를 맞고 있기 때문에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그걸 지키기 위해 함께 싸워야 된다는 것을 말씀드렸다”며 “전 민주주의와 법치주의를 지키는 것이 5·18정신과 무관하다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했다.

장 대표는 ‘판사시절 전두환씨의 불출석을 허가해 재판을 지연시키지 않았냐’는 질문에 “저는 오늘 국민의힘 당대표로서 5·18 묘역을 찾은 것”이라며 “전두환 전



장동혁 국민의힘 당대표가 광주를 방문한 6일 오후 광주 북구 윤정동 국립5·18민주묘지 민주주의문에서 광주시민들이 주저앉아 장대표의 참배를 온몸으로 막고 있다. /뉴스1

대통령에 대한 사자명예훼손 사건에서 불출석을 허가한 것은 형사소송법은 피고인의 출석 없이는 재판을 못하게 하고 예외적으로 불출석 재판이 가능하게 돼 있다. 피고인 출석이 담보됐을 때 재판을 진행하게 한 건 피고인 방어권 보장을 위한 것이었다. 그 사건은 불출석이 가능한 사건이었고 피고인이 방어권을 포기한 사건이었다. 굳이 출석을 강제할 이유가 없어서 특례 논란은 적절치 않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장 대표는 “5·18 때 북한 개입 가능성을 언급했던 도태우 대구 중남구 국회의원 예비후보의 공천을 옹호해 5·18민주화운

동을 폄훼하고 왜곡했다”는 질문에 “도태우는 당의 공천 시스템에 의해 경선을 통과해 후보가 됐던 것이고 다른 여러 발언이 문제돼 결국 공천 취소했다”고 말했다. 또 윤 전 대통령의 탄핵 기각 발언과 관련해 “계엄을 떠나 모든 재판은 적법한 과정에 따라 진행되어야 하는데 헌법재판소 탄핵심판 과정에서 정당한 절차로 심판이 진행되지 않았다”며 “그래서 과정과 절차를 문제 삼고 탄핵은 기각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던 것”이라고 했다.

장 대표는 5·18 정신 헌법 수록에 대해 “국민의힘은 이미 5·18 정신을 헌법 전문

에 수록하는 것 대해서도 동의하고 있다”며 “여야 이견이 없는 부분이라 적절한 논의를 거쳐 논의 결과에 따라 헌법 전문에 반영될 것”이라고 말했다.

장 대표는 이날 국회 운영위원회에 김현기 대통령실 부속실장이 불출석한 것에 대해 “민주당에서는 어떻게든 김 실장의 출석을 막고자 하는데 국민들께서 지켜보고 계신다”며 “무엇을 감추기 위해 출석을 막는지 국민들의 의혹은 계속 커져가고 있다. 그 부담은 결국 이재명 정권에게 스러질 돌아갈 것”이라고 했다.

/이경현 기자



광산구의회, ‘농민 역차별 해소’ 조례 제정 간담회 전국 최초 조례로 농민 역차별 해소 및 권익 향상 발판 기대

광산구의회 경제복지위원회(위원장 김영선)가 4일 ‘농민 역차별 해소 지원’ 조례 제정을 위한 정책간담회를 개최했다.

1988년 광산구가 광주광역시에 편입된 이후 37년 동안 광산구 농민들은 읍·면·동 농민과 달리 농업 지원에서 배제되거나 차별을 겪어왔다. 똑같이 농사를 짓는데도 광산구 농촌동에 거주한다는 이유만으로 지원에서 제외되는 사례가 반복되면서 지역 농민들의 가장 큰 애로 사항으로 작용하고 있다.

이에 광산구의회는 농민 역차별 해소를 위한 조례를 전국 최초로 추진하고 있으며, 이번 간담회는 광산구 농촌동 농민들이 겪고 있는 제도적 불평등 상황을 실태조사 하여 그 결과로 농민 권익 향상 방안을 모색함으로써 조례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간담회는 심재현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연구위원, 이갑성 광주광역시농민회 감사, 이민철 광산구도시재생공공단체 센터장을 비롯하여 지역 농민단체 관계자들과 광산구의원, 관계 공무원 등 4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김영선 광산구의원(더불어민주당, 수완동·하남동·임곡동)의 주재로 진행됐다.

먼저 심재현 연구위원이 주제 발제

를 통해 “최소 23개 이상의 중앙정부 및 지방자치단체 사업에서 광역시 동 지역 농민이 배제되어 생존권과 경제적 안정을 심각하게 위협받고 있다”며 “인구 감소지역 지정 시 기존 ‘시·군·구’ 단위가 아닌 ‘읍·면·동’ 단위 통계를 고려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또한 지정토론에 나선 이갑성 감사는 “광산구 농업 인구는 인근 장성군과 비슷하고 함평군의 1.8배 수준이지만, 농업 예산은 장성군과 함평군 대비 40%에 불과하다”며 “기금을 마련할 수 있는 실질적인 대책이 함께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민철 센터장은 “광산구 농촌동의 문제는 지역의 불이익을 넘어 대한민국 농업정책의 정의와 헌법적 평등 원칙을 묻는 과제”라며 “동일한 노동과 사회적 기여를 하는 농민이 ‘동’에 거주한다는 이유만으로 차별받는 것은 헌법에 보장된 평등권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강조했다.

김영선 의원은 “광산구뿐만 아니라 광주 타 자치구와 농촌동이 있는 모든 도시지역까지 농민들의 역차별이 해소되는 좋은 발판이 열릴길 기대한다”며 “이번 논의가 농민의 권익을 보장하는 실질적인 지원 정책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김준형 기자

나주시의회, 제274회 원포인트 임시회 개최

나주시의회(의장 이재남)는 6일 제274회 원포인트 임시회를 열고 ‘나주시 인공태양 연구시설 유치 및 재정지원 확약에 관한 동의안’을 의결했다.

‘인공태양’이란 태양의 에너지 생성 원리(핵융합)를 지구에서 인공적으로 구현하여 막대한 청정에너지를 생산하는 기술로 온실가스를 전혀 배출하지 않고 고갈의 우려가 없는 기후 변화, 에너지 안보, 탄소중립 문제를 동시에 해결할 수 있는 에너지 자원이다.

이날 나주시의회는 16명의 연대 서명으로 공동 발의된 ‘인공태양 연구시설 나주시 구축 촉구 건의안’을 제안하며 “나주

시는 한국전력 본사, 한전KPS, 전력거래소 등의 소재지이며 나주혁신산단 등지에 670개 이상의 전력 기저재 및 에너지 연관 기업이 집적된 국가 에너지 기술의 미래를 선도할 인공태양 연구시설의 최적지”라고 강조했다.

이재남 의장은 개회사를 통해 “최종 부지 선정이 11월 말에 예정된 지금, 우리 나주는 미래 에너지의 중심이 될 수 있는 결정적 기회, 인공태양 연구시설 유치라는 큰 도전과 마주하고 있다”며 “우리 아이들이 떠나지 않아도 되는 도시, 기업이 찾아오는 도시, 그리고 시민 모두가 안정적인 에너지 속에서 살아가는 도시가 될 수 있



도록 의회의 지혜와 집행부의 추진력, 시민의 힘을 하나로 모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인공태양’이라는 명칭 때문에 안

전을 걱정하는 목소리가 있다며 “철저한 정보 공개와 과학적 검증으로 시민들이 안심할 수 있도록 각별히 신경 써달라”고 집행부에 당부했다. 나주/이명열 기자

정청래, 민주노총 찾아 “尹정권, 노동자 외면… 이정부 다룰 것”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6일 “윤석열 정권 3년 동안 우리 노동계는 정말 어려움이 더 많았고, 또 거듭되는 산업 재해 속에서 노동자들의 생명과 안전을 최우선적으로 지켜달라는 외침이 정말 많았는데 항상 외면당했던 것 같다”고 말했다.

정 대표는 이날 오전 서울 중구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에서 열린 ‘민주노총-민주당 정책간담회’에서 이같이 말하며 “생존권을 지키기 위해 거리로 뛰쳐나온 노동자들을 강성 노조니, 귀족 노조니 매도하기도 했다”고 했다.

이어 정 대표는 “윤석열 정권에게 노동자 한낱 기업의 이익을 위한 도구였을

뿐 국가 경제를 함께 이끌어가는 주역으로 인정하지 않지 않았다 그런 생각도 했다”며 “별시와 통제, 감시와 억압이 윤석열 정권 노동 정책 그 자체였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재명 정부는 좀 다를 것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취임 직후부터 지금까지 산재 없는 노동 현장을 계속 강조하고 국정 주요 목표로 지금 잡고 있다”며 “민주당의 생각과 목표도 여러분들과 크게 다르지 않다. 노동자, 노동조합은 이재명 정부의 가장 강력한 지지 세력이며 민주당의 영원한 동반자”라고 했다.

/뉴스1

서툰 걸음부터

느린 걸음까지

당신의 삶, 처음부터 끝까지 함께합니다. h-well 국민건강보험